

민주당, 대선 득표율로 의원 평가... '줄세우기' 논란

이재명식 '성과 중심 공천 시스템' '봉선동·광양시, 지역특성·고려해야' 계파 정리 수단·지역기반 약화 우려 '당내 분열·공천 갈등 반작용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지역구별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의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균 득표율은 높으나,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이나 전라남도 순천·광양시 등 일부 보수 성향을 보이는 지역구도 있어 "정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각 지역구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국회의원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공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전국 읍면동 단위로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득표율을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반영한 바 있어 이번 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에 당 내부에선 이번 평가 기준 도입이 이재명의 실용·성과주의 철학을 반영한 '성과 중심 공천 시스템'의 시발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0.73%p 차이로 석패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의 직함을 떠나 실질적인 성과를 낸 인사를 높이 평가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뜻"이라며 "득표율과 투표율은 성과 중심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선관위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성과 중심의 정량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차등화된 득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

20대 대선 광주·전남 득표율

지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동구	82.69	15.04
서구	84.63	13.04
남구	84.27	13.48
북구	85.12	12.40
광산구	85.52	11.75
전라남도		
목포시	87.23	10.35
여수시	86.03	11.67
순천시	85.12	12.41
나주시	85.78	11.82
광양시	81.35	15.82
담양군	87.57	10.00
장성군	86.33	11.34
곡성군	85.29	11.61
구례군	85.11	12.40
고흥군	86.66	10.96
보성군	86.85	10.68
화순군	87.83	9.80
장흥군	87.86	9.52
강진군	85.32	12.19
완도군	88.89	8.82
해남군	87.83	9.79
진도군	86.81	10.74
영암군	86.27	11.06
무안군	86.77	10.84
영광군	85.84	11.28
함평군	88.64	8.88
신안군	88.53	9.46

*출처: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별 개표결과 자료 (단위:%)

준으로 지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투표 독려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80%대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지역의 올해 대선 득표율 목표를 90%로 설정했다.

그러나 호남 일부 지역에선 관련 기준이 "정치 지형과 유권자 성향이 반영되지 않은 기계적 평가"라는 반발이 나온다.

▶관련기사 4면 서울=김선욱 기자



담양 대나무축제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전국에서 온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신록으로 우거진 담양 대나무축제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익명을 요청한 한 광주광역시의원 "봉선동의 경우 광주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39%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이재명 후보는 54.2%에 그쳤다"며 "지금은 비상계엄 등으로 봉선동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기울긴 했지만, 광주 타 지역에 비해 보수 지지세가 높아 시작점 자체가 다른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라남도 또한 타 정당 후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지세가 존재하는 순천·광양·여수 등 동부권의 항의가 거세다.

실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전남 전체 평균 득표율은 86.10%였다.

여수시는 86.03%로 평균에 근접했지만, 순천은 85.12%, 광양은 81.35%로 평균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호남은 이미 전국에서 민주당을 향해 가장 많은 표를 주고 있으며, 투표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해당 지역이 안고 있는 정치적 다양성과 무소속 강세 구도 등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 형평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새 인물 발굴을 위한 성과 중심 공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는 공감한다. 실제 영광·담양 재선거에서도 인물론이 부각되며 어려운 싸움을 치르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는 오히려 의욕을 꺾을 수 있다. 단순한 득표율 수치보다 변화에 대한 노력과 지역 특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평가 기준을 정량적 성과 평가로 포장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간접적인 '정리'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역 득표율로 환산해 의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이재명 후보와 일정 거리를 뒀던 의원들에게 불

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결국 이 평가가 계파 정리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량 평가 방식 도입이 지역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남의 한 원외 정치인은 "지역 득표율과 투표율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경우, 결국 유권자와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나 공동체 기여 같은 정치 본연의 활동보다 수치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보수세가 강하거나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은 구조적으로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단순 수치로 비교할 경우 해당 지역 정치인은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성과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현장 조직의 실질적 기여와 지역 정치 환경이 외면된다면 그 반작용은 당내 분열과 공천 갈등이라는 이중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이석연 "대선 전 추 선고 강행은 위헌"

"사법권 한계 벗어난 정치재판" 조희대 탄핵 주장엔 "신중해야"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바 있는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존중하는 것이지 목적만 앞세우는 게 아니다"라며 "적법 절차의 준수가 무시되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 자위헌적 처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속전속결로 6·3 대선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 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15일은 본격적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행위도 "낙선자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끄집어내는 부관참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판결을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탄핵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서울=김선욱 기자

김누리 "한국 교육, 민주 시민 아닌 파시스트 양산"

입시·학력 추구...경쟁·복종 당연시 "엘리트층, 권위주의적 사고 깊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한국 교육과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근 광주를 찾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교육 체계는 오직 입시와 학력만을 추구한다"며 "이는 민주 시민이 아닌 파시즘을 신봉하는 파시스트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파시즘'은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앞세우고, 종종 폭력과 탄압을 통해 그 질서를 유지하려는 극단적 전체주의를 말한다.

그는 "경쟁과 우열, 복종을 당연시하는 한국 교육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 구조가 사회 전반

에 파시즘적 사고방식을 내면화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대 법대를 비롯한 엘리트층에서도 민주적 가치보다 권위주의적 사고가 깊게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독일의 경쟁 폐지형 교육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1970년대 독일은 '경쟁 교육은 야만'이라는 인식 아래 등수와 석차를 폐지하고 대학 입시도 없앴다"며 "이는 민주 시민 양성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다양성과 평등을 중심으로 둔 교육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구조에 대해서 "한국 양당제는 수구·중도 보수의 권력 분점일 뿐"이라며, "민주당도 진보 정당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우물쭈림이 그 증거"라고 했다.

지역주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호남이 진정된 진보 정당의 토양이 돼야 한국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민주주의는 제도보다 시민의 성숙에 달려있다"며 "일상 속 경쟁과 복종을 당연시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파시즘"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정유철 기자



진일보



@jnlibo
QR코드를 찍으면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진일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